

“이번주 새만금 에너지 박람회 열린다”

경주 APEC 정상회의 대비

김윤덕 국토부장관, 교통분야 준비상황 현장 점검



전북 출신인 김 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APEC 정상 회의(10월말 개최 예정)를 대비하여 김해공항, 경주역, 고속도로·국도 시설 정비 현황 등 교통 및 도로 인프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주요 정상 및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의 방한 시 입·출국 경로별 준비상황, 혼잡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김해국제공항을 찾은 김 장관은 현장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 후 출입국 이동 동선, 주기장 현황, 공항 내 안내 계획, 국제선 제2출국장 공사 현장(9월 완공 예정) 등 시설 내 세부사항을

살펴보았다. 현장에서 김 장관은 “공항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맞이하는 첫인상 이므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 공항공사, 공군이 협업하여 남은기간 편리한 서비스와 안전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경주역으로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및 국도 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한 후 경주역에서 역사 내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시설 개량, 대합실 내 참가자 안내계획, 정상급 차량 이용 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항공, 철도, 도로 등 주요 시설의 개량과 보수작업이 9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행사 준비는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이 지난 5일 초청 기자실에서 8~12일 초청 주요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이어 10시 30분에는 초청 종합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주 서울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11일 오후 3시에는 중앙협력본부 회의실에서 7개 스타트업 기업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오후 6시에는 더플라자호텔 인근에서 메이오 클리닉, 차바이오 관계자들과의 바이오 기업 관계자 면담 및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김 지사의 메이오 클리닉 방문 후속 조치이자 차 바이오와의 MOU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및 투자, 그리고 한국 법인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11일 오전 11시 전북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매칭데이 행사가 개최되며, 김관영 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기술 혁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고창에서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열려 도민들의 스포츠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8~12일 초청 주요일정 발표 아프리카 스포츠·경제 외교 등 행보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8~12일 주요 초청 추진 방향과 행사 계획을 공개하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5일 오전 초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밝히며 ‘열린 초청’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8~12일, ‘새만금 에너지 박람회’와 ‘미래 첨단 산업’ 관련 일정이 집중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도내 외 다양한 행사 및 경제·스포츠 외교 활동도 예정돼 있어 전북도정의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번 주에는 ‘2025 새만금 에너지 박람회’가 열린다. 9일부터 10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C)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새만금의 ‘RE100 선도 모델’ 비전을 널리 알리고, 기업 유치 및 관련 산업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RE100 포럼’과 ‘에너지 솔루션 열라이언스 기업 유치 홍보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새만금의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경제부지사를 총괄로 하는 4박 7일간의 아프리카 출장도 9일부터 15일까지 시작된다. 나미비아와 짐바브웨를

방문하여 올림픽 위원장 및 정부 관계자 면담, 유소년 축구 의형서 체결, 축구단 방문 등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 행사 등을 통해 전북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10일에는 오전 9시 20분부터 한빛원전 방문은 방재 합동 훈련이 진행된다. 고창, 부안 등 전북도 내 인근 지자체와 전남의 영광, 장성, 함평, 무안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도상 및 현장 훈련을 겸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중요한 안전 훈련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초청 공연장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대회가 열려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및 선인 낭독 등을 통해 사회복지인들의 노고를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11일 오전에는 미래 첨단 산업국 브리핑이 예정돼 ‘AI와 데이터를 통한 전북 미래 설계’ 비전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오후 3시에는 완주 센터 건립 예정지에서 수소차 폐연료 전지 자원 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기공식이 열리며, 산업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정치권의 주요 일정이 전북에서 이어진다. 오전 9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사무실에

문 전 대통령, 전주독서대전 ‘깜짝’ 방문 “다른 행사보다 애정 각별”

평산책방 부스 등 둘러봐 안도현 시인 강연 찾아 “전주, 전통예술의 중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전주독서대전이 열리는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주시 완산구 전주한벽문화관·완본문화관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8회 전주독서대전 현장을 찾았다.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차량을 타고 완본문화관에서 하차한 문 전 대통령은 앞서 마중을 위해 나와 있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의 환대를 받았다. 짧은 인사를 마친 뒤 문 전 대통령 부부 내외는 독서대전을 위해 차려진 각 서점·출판사 등의 부스를 둘러봤다. 문 전 대통령이 한 발자국씩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부스와 그 주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바로 이번 독서대전에 부스를 차린 ‘평산책방’이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책방의 책방지기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 등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부스를 도는 현장에 동행했다. 김 지사는 평산책방 부스에서 “대통령님이 추천하신



지난 5일 제8회 전주독서대전이 열리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북마켓 부스를 순회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책 2권을 사겠다”며 현장에서 추천사가 기재된 책을 구매했다. 한 개 한 개 부스를 돌 때마다 독서대전에 참여한 이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사인을 해달라”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고, 문 전 대통령은 시민들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수십여개의 부스를 모두 돈 문 전 대통령은 기획전시 공간에 둘러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평산책방 대표 이사로도 재직중인 안도현 시인의 강연 현장에도 깜짝 방문했다. 강연을 듣고 있던 시민들은 문 전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짧은 인사말을 통해 “전주는 우리 전통문화 예술의 중심도시이지 않느냐. 전주시민들의 문화예술 교양 수준이 아주 높다”며 “전주독서대전도 우리 정부 시절에(시작돼) 전주시가 책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가 마련한것인데, 지금까지(독서대전이) 이어지고 있어 다른 행사보다 좀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곧바로 자리를 옮긴 문 전 대통령은 우 시장 등 전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후 녹두관을 둘러본 뒤 모든 일정을 끝

냈다. ‘남기는 순간’을 주제로 한 제8회 전주독서대전은 7일까지 이 장소에서 3일동안 진행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책의 도시 전주를 다시 한번 알릴 수 있게 평산책방지기로 깜짝 방문해 준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전주독서대전이 단순한 지역의 책 축제를 넘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입주 예정 주거 불안 야기’ 김제 서희스타힐스 분쟁 ‘봉합’

민주 도당·김제시 중재로 최종 합의… 주거 불안 덜어

입주 예정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했던 김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의 공사비 분쟁이 마침내 해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제시와 도당의 적극적인 중재로 남전주(주)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주)서희건설 간 분쟁이 최종 합의로 봉합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

‘실제 변경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공사비 지급 약속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어 입주를 기다리던 주민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양측은 지난 3일 최종 합의서 작성을 완료하며, 꼬여있던 실타래를 풀고 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번 문제는 김제시와 도당의 적극적인 중재로 최종 합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주택조합 측의 문제 해결 요청을 접수한 도당은 곧바로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협의 테이블을 가동했다. 수차례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 도당은 ‘정지력’을 발휘하여 이견을 조율하고, 김제시는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정치권과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오랜 시간 불안에 떨던 입주 예정 주민들이 이제 안심하게 됐다.

도당은 “분쟁 당사자인 주택조합과 시공사의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김제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가 주민 주거 불안 해소에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도당은 “주거 문제를 포함한 민생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 도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제도 개선으로 돌봄 붕괴 막아야”

국주영은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지난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종중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제도적 기반 정비 △최종중 발달장애인 안정적 돌봄을 위한 운영 지원 △중증사자 처우 개선과 돌봄 공백 해소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선 필요”

김이재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이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발달한 특정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가는 등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매입의 1.5~4%인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만호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시행, 주변지역 범위 확대를”

김정기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원전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닌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안은 주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김정기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안전을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행령안을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